



보도 일시	2022. 9. 1.(목) 12:00	배포 일시	2022. 9. 1.(목) 07:00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홍재승 (044-200-2430)
		담당자	서기관 정현욱 (044-200-2366)
			사무관 송지애 (044-200-2407)

부르면 찾아오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올해 연말부터 도입 가능해진다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소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26)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의 각 부처 추진과제 중,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
 - * 2022년 8월 29일 보도자료 배포(규제 새로고침, 국민생활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 오늘은 두 번째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9개 과제를 사례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과제	소관
① 실외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사업 허용으로 소비자 편의 증가	산업부
② 하나의 미용실로 다수 미용사 창업 허용	복지부
③ 1인 소프트웨어 업체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으로 영세사업자 고용부담 완화	조달청
④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확대로 대기업 투자 확대 촉진	공정위
⑤ 드론 안전성 검사방식 개선으로 검사기간 대폭 단축(2개월→2주)	국토부
⑥ 정부 주도 자율주행기기 이동경로 구축으로 기업비용 절감	행안부
⑦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제한요건 완화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교육부
⑧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 국내기업 인턴 채용 허용으로 우수인재 유치 가능	법무부
⑨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완화로 영세업체의 사무실 임차비용 부담 경감	산림청

① (계획) 실외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사업 허용으로 소비자의 충전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22.12)

- ▶ (현황) 현재 상용전원(AC)에 연결된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기준이 있으며,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는 기준 부재로 인증 불가
- ▶ (개선)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내충격성 등 4가지 항목) 마련

경기도 소재 A 기업은 전기차충전기와 전력저장용 배터리를 활용한 융복합 신제품인 '이동식 전기차충전기'를 개발하였다. 주차면에 설치되어 제한된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했던 기존 고정식 충전기를 탈피하여 ①부르면 찾아오는 수요자 중심(On-Demand)형 차량 탑재 방식과 ②마트 등에 비치되어 손쉽게 충전이 가능한 카트형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현행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에 따라 '이동식 전기차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하여 제품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가 곤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검증 방법을 마련하여 해당 제품의 KC인증 및 제품출시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계획) 여러 미용사가 하나의 미용실을 같이 사용하여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유 미용실 제도화**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12)

- ▶ (현황) 동일한 영업장 내의 미용업 간 시설 및 설비의 공동 사용 불가
- ▶ (개선) 동일한 영업장 내의 일반미용업 간에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생관리 기준 등 마련

강남의 프랜차이즈 A미용실의 경력 7년 차인 30대 미용사 B씨는 단골고객도 어느 정도 있고 월 매출도 2천만 원 정도이지만, 인센티브 계약으로 실제 수입은 일한 만큼 되지 않아서, 개인 미용실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A미용실과 비슷한 상권에 1인 미용실을 창업하려면 시설 및 장비, 보증금(권리금) 등 수천만 원의 초기 비용과 월세 등 월 3백만 원 이상의 고정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부담과 첫 창업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후 폐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B씨는 창업이 망설여졌다.

마침 공유미용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미용실이 제도화되어 하나의 영업장에서 일부 시설 및 장비를 여러 명의 일반미용업 영업자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B씨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되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미용실을 열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과 휴무일도 자유롭게 정하고 스스로 일한 만큼 수입을 얻게 됨에 따라 매우 만족하고 있다.

③ (계획) 1인 소프트웨어 업체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영세 사업자의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 소프트웨어 제품 직접생산기준 완화

(조달청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22.9)

- ▶ (현황) SW 업체 공공조달시장 진입 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필수 고용 필요
- ▶ (개선) 소프트웨어 관련 제조물품의 경우, 소프트웨어기술 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이라도 직접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 신설

충주시에 위치한 1인 기업 A업체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관련 물품을 제조등록 하려 했으나, 조달청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직원 1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며 제조등록을 반려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관련 물품은 프로그램 개발 이외의 제조공정이 없어 별도의 생산인력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기업은 고용유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생산 요건 충족을 허용함으로써 고용유지 부담에서 벗어나 영세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④ (계획)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조건 완화로, 대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2.12)

- ▶ (현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되어야 중소기업 계열편입 유예조건 충족
- ▶ (개선) 중소기업 계열편입 유예 조건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으로 기준 완화

* 요건 완화 시 적용 대상 중소기업 약 15만개 증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니콘 A회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면 각종 자료제출 의무 및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되고,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적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물론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으로 계열편입 유예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이상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요건이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3% 이상으로 완화되어 대기업집단으로 계열편입이 7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유니콘 A회사에 대한 투자나 인수에 관심을 갖는 대기업이 늘어나게 되었다.

⑤ (계획) **드론의 안전성 검사방식 합리화로 검사 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 **드론 안전성 검사방식 개선** (국토교통부 /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22.12)

- ▶ (현황) 드론(25kg 이상)의 안전성 인증 검사를 전수검사 방식으로 운영 중이나, 검사 수요 급증으로 검사대기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기업·국민 불편 발생
- ▶ (개선) '전수검사'에서 '모델별검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절차 간소화*로 검사기간 단축 (2개월 → 2주)

* 구매자가 모델별 대표검사를 받은 드론을 구매하는 경우, 인증 신청 시 서류검사로 대체
→ 서류검사 대체에 따라 검사비용 50%(연 3억원) 절감

충남의 A씨는 함께 농사를 짓는 지인들과 드론을 구매하여 농사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드론 사용 전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2021년경 부터) 안전성인증대상 드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드론의 안전성인증 신청 시 대기기간 (약 2개월)이 소요되어 불편 민원이 발생하였다.



드론의 수요 급증에 따른 안전성인증 지연 등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안전성인증 방법을 대폭 개선(기체별 전수검사를 모델별 검사로 대체 추진)함에 따라 드론 구매·이용자들이 안전성인증 시 불편해소(약 2개월→2주)는 물론 드론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 (계획) **정부가 자율주행기기 운영에 필요한 이동경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구축 비용이 절감됩니다.**

✓ **자율주행기기* 이동경로 구축** (행정안전부 / 자율주행기기 이동경로 인프라 구축, ~'22.11)

* 로봇, 드론, 자동차 등

- ▶ (현황) 자율주행기기 운영에 필요한 이동경로가 구축되지 않아 도입·확산 어려움
- ▶ (개선) 자율주행기기의 운영에 필요한 이동경로 인프라 구축

A 기업은 자율주행로봇 운행 기술을 개발하여 로봇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나, 최종 목적지 및 이동경로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기업이 직접 데이터를 구축해야 해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데이터 구축에 고비용이 발생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는 표준화가 되지 않아 기업간 데이터 공유가 힘들다. 아울러 향후 표준화를 위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는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 주소체계에서 벗어나 도로에서 방문 앞까지 주소정보를 정부가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⑦ (계획)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계약학과* 설치 시 제한요건 완화** (교육부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 ~'22.12)

* 산업체 맞춤형 교육진흥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기업 재직자를 대학에서 교육

- ▶ (현황) 계약학과 설치 시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동일한 권역*** 내에 있어야 설치 가능
→ 권역이 **광역행정구역(17개 시도) 내로 제한**되어 산업체의 대학 선택권 제약
* 동일 시도 또는 직선거리 50km까지 '동일 권역'으로 인정
- ▶ (개선) 광역행정구역 중 **시 단위(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등)와 지리적으로 소속된 도 단위**는 동일 권역으로 통합 인정하여 권역제한 완화
* 예시 : 부산광역시는 지리적으로 소속된 경상도와 동일 권역으로 포함

A 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중견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동남권)의 직원 재교육을 부산의 B 대학에 일괄 의뢰**하고 싶었으나, 권역 제한 요건으로 인해 권역 외 지역인 **울산 및 경남지역의 직원들은 동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일정 조율 및 승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계약학과 설치 추진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규제 개선 후, **동일 광역권 내에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A 기업은 기업 맞춤형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각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계약학과 설치·운영 대학 및 교원에 대한 선택권도 확대**되어, 향후 재직자의 지속적인 직무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⑧ (완료)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도 국내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 국내기업 인턴 허용**

(법무부 / 구직(D-10)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완료, '22.8월)

- ▶ (현황) 해외대학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 인턴 수요가 존재함에도,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턴활동 불가
- ▶ (개선)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기술 분야 인턴비자**를 신설하여 **국내 기업체에서의 인턴 허용**

중기부에서 인정한 벤처기업인 A 기업은 학회에서 만난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B 씨를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기를 희망하였으나, **B 씨가 아직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 분야 기업·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 기업 등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획) **한 법인이 여러 종류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 사무실 임차 없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완화**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2.12월)

▶ (현황)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조사,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사업 종류별로 사무실을 각각 갖추도록 규정**

→ 사업 종류를 추가할 경우, **사무실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업계 부담

* 2,588개 업체 중 2,060개 업체(79.6%)는 2종류 이상의 사업 운영 중('21년말 기준)

▶ (개선)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할 경우, 기존 사무실을 중복 인정**하여 산림사업 법인의 사무실 추가 확보에 따른 임차료 부담 등 완화

충남 산림사업법인 A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산림 사업을 추가하고 싶지만, 추가 등록 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로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연간 약 6 백여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림사업법인이 **사업 종류를 추가**하더라도, **사무실을 중복 인정**해 줌으로써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임차비용을 감소**시켜 **영세한 산림사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과제별 담당자 현황



연번	과제명	담당(연락처)
1	실외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사업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구사 서인석 (043-870-5444)
2	하나의 미용실로 다수 미용사 창업 허용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 사무관 원지영 (044-202-2859)
3	1인 소프트웨어 업체 공공조달시장 진입 허용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사무관 이성일 (054-716-8161)
4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사무관 김나영 (044-200-4850)
5	드론 안전성 검사방식 개선으로 검사기간 대폭 단축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사무관 원정윤 (044-201-4285)
6	정부 주도 자율주행기기 이동경로 구축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사무관 고종신 (044-205-3552)
7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제한요건 완화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사무관 박은정 (044-203-6806)
8	해외 우수대학 외국인 재학생 국내기업 인턴 채용 허용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지원 (02-2110-4067)
9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완화	산림청 일자리창업팀 사무관 이호중 (042-481-4187)